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신문사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7월 18일 화요일 (음 윤5월 25일) 제 185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문화특별시 전주, 대한민국 보물로

▶ 국회서 특별법 제정 세미나

“문화특별시 추진,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적절 목표 아닌 수단으로 문화 재확산 이뤄내야”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승수 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장, 정동영·김광수·진선미·손혜원·김병관·소병훈 국회의원과 문화전문가, 입법전문가, 지역발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지방자치전문가와 입법전문가들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역발전 전략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특별법은 전주에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이날 ‘기초지방정부의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특별자치제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승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의 특별자치제도와 특별자치제도의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전주시에 주도권을 갖는 문화특별시의 추진은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며 “문화의 발달을 위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통합이 선도적으로 이뤄지는 전주문화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가 1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언했다. 이어,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조성 및 특별법 제정의 방향’을 발제에 나선 원도연 원광대 교수도 전통문화를 산업화 할 수 있는 전주의 지력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특수성 등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해 역설하고, 문화특별시 지정 효과를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와 역할 등에 대해 제안했다.

발제 후 이종민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은 “전통문화의 위기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전통문화특별시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 돼야 한다. 1차적으로는 소멸해가는 전통문화의 집적과 재창조, 2차적으로는 전통문화의 재확산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주문화특별시의 경우 단순히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도시 재생과 연계 시킴으로써 문화를 통해 도시를 리모델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차별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과 하중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각각 ‘새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방향’과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전주시는 향후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특별시 전주포럼을 구성해 의 전주문화특별시 추진 계획과 전략 수립 등 청사진을 마련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북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정책 추진방향’과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전주시는 향후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특별시 전주포럼을 구성해 의 전주문화특별시 추진 계획과 전략 수립 등 청사진을 마련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북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동시에,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꾸준한 건의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울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라면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며 “문화특별시 지정은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준다면,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전주, 문화특별시 전주를 대한민국의 보물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매일 INDEX
6면 - 재벌 '일감 몰아주기' 손본다

문 대통령, 차관급 8명 인선

농진청장에 '김제출신' 라승용 전북대 석좌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임 조달청장에 박춘섭(57)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병무청장에 기찬수(63)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을, 농촌진흥청장에 라승용(60)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관련기사 6면)

또 산림청장에 김재현(52)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기상청장에 남재철(68) 기상청 차장을, 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오동호(5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상임위원을, 국립고교원장에 조병제(61) 전 외교부 대변인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배기동(65)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들 중,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김제출신으로 김제 농업공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에서 농학과 원예학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정책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국립농업과학원장을 거쳐 현재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에 재직 중이다. /인재용 기자

‘원평집강소’ 전북도 기념물 지정

동학농민혁명 무렵 지어진 집강소 중 유일하게 남아

동학농민군이 조선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한 뒤 관민상화(官民相和)의 원칙에 따라 전라도 53개 군·현에 설치한 자치행정기구인 집강소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원평집강소가 전북도 기념물 제 137호로 지정되었다.

이 건물은 1882년 4칸의 초가로 지어졌으며 혁명 시기에 백정 출신 동록계가 동학의 원평대접주 김덕명에게 ‘신분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헌납한 건물로 알려져 있으며 건축연도가 기록된 상량문과 일본인의 원평집강소 순찰기록, 김덕명 장군의 후손들의 구술기록이 일치하여 원평집강소였다는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원평집강소는 일제강점기에는 면사무소와 원불교 불법연



구회 교당으로 광복이후에는 개인주택으로 사용되다 붕괴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김제시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손을 잡고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건의, 이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문화재청이 인정해 긴급매입 복원자금 6억4,000만원을 받아 1년여 동안 문화재전문가 및 주민의 고충과 자문을 통해 복원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가야유적 독창성 살린다

도, 연구복원 전문가협의회 중앙정부 기본계획 수립 따라 발굴 등에 8538억원 투자

전북 가야유적의 독창성을 살리고, 스토리텔링과 연계한 체계적인 연구와 발굴작업 등이 본격화된다.

전북도는 17일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북 가야 관련 연구복원을 위한 T/F팀 및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협의회는 가야 연구관련 학계교수 및 전문가와 도의원, 가야유적과 관련 있는 6개 지자체(남원, 장수, 완주, 진안, 무주, 임실) 관련부서가 참여했다.

또 가야사 연구복원을 위해 전북도가 새롭게 구성한 T/F팀이 참여해 실무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전북도는 지난 6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와 복원이 호영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지시한 후, 가야사 연구복원 기본계획

용역(1억원)과 발굴조사비(2.2억원)를 추경에 반영한 바 있다.

그동안 전북이 영남에 비해 가야유적에 대한 관심 및 발굴 등 연구성과가 미비한 점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연구·발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전북 가야의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 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와 함께 봉수 및 제철유적의 특화를 포함해 전북만의 특성화된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등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앙정부의 가야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확보 및 사업선정에 발 빠르게 대응할 목적으로 발굴, 정비, 활용 부문 27개 전략사업에 8,538억원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남원 두라리, 고기리, 옥계동 발굴유적과 완주 구여리 산성, 진안 황산리 고분군, 무주 봉화산, 추천리 고분군, 장수 삼고리, 동촌리, 노하리, 대적골 등 우선 추진대상과 ‘가야특별법’ 제정에 따른 향후 후속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김진성 기자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